

李 “전쟁 추경’ 서둘러야… 자동차 5부제 등 비상대책 강구”

李 대통령, 서민·기업 지원 강조
원전 가동 확대 등 에너지대책 언급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동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취약계층과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예산 심의도 사상 최고의 속도로 하겠다’고 말씀했는데, 국회도 빨리 심사해 전쟁 예산, 전쟁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으로 급등했던 기름값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후에 다소 안정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최고가격제 시행 효과를 보다 충분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현장 점검 강화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문했다.

이어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양상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UAE(아랍에미리트)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했던 것처럼 우리의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서 안정적인 추가 대책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며 “상황이 어려운 만큼 우리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도 필요하다.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필요하다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늘린다든지 이런 비상 대책도 강구해야 되겠다”면서 “중기적 대책으로 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최대한 신속하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 절약 노력을 범사회적으로 확산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자동차 5부제 혹은 10부제 등 다각도의 에너지 수요 절감 대책을 수립해달라”며 “필요하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늘리는 등 비상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도중에도 유류세 인하에 대해 “유류세를 깎아주는 것보다는 추경 편성을 통해 걷어들일 세금을 피해 계층에 지원해 양극화 완화에도 쓰는 게 맞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일 당장 전쟁이 끝나면 모르겠는데, (장기화되면) 석유 최고 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며 “재정부담이 너무 커서, 실제 원가하고 차액을 우리가 보상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물

었다.

이어 “최고가격을 올리는 것은 각오를 해야 된다”며 “(이와 함께) 유류세를 좀 내려주든지, 아니면 바우처를 주든지, 기타 소비 지원을 해주든지 해야 될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가 전체 석유류 소비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다. 수출 통제도 해야 되고, (차량) 10부제, 5부제도 해야 될 지도 모르고, 원전 가동률도 높이고 온갖 비상대책을 해야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보다는 직접 지원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께서도 ‘유류세를 대폭 깎아달라’ (하지만), 유류세를 걷어서 다른 데 안 쓴다”며 “이번 피해 상황에 국민들이 더 고통받지 않도록, 유류세를 깎아주는 것처럼 재정 지출을 더 하겠다는 말이다. 그래서 추경을 빨리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유류세를 인하해서 얻는 정책적 효과보다는, 그만큼을 오히려 재정에 투입하겠다는 의미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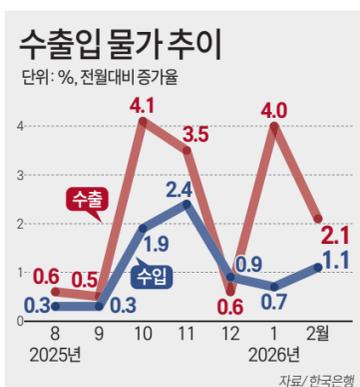
metro

반도체 중심 교역조건 개선… 유가·환율 등 비용부담 ‘암초’

2월 수출물가 전월대비 2.1% 상승
대외환경 급변… “추가 개선 불투명”

한국 경제가 지난 2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강세에 수출물가와 수출물량이 함께 뛰면서 교역조건도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하지만 3월 중동 리스크와 고유가, 환율 변동성이 다시 전면에 부상하면서 2월의 개선 흐름이 이어질 지 장담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수출물가(원화 기준)는 전월 대비 2.1%, 수입물가는 1.1% 각각 상승했다. 무역지수 기준으로는 수출물량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16.6%, 수출금액지수가 28.6% 올랐고, 순상품교역조건지수와 소득교역조건지수도 각각 13.0%, 31.8% 상승했



다. 수출 가격과 물량이 함께 늘면서 대외거래 여건은 2월까지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는 평가다.

2월 지표 개선의 중심에는 반도체를 포함한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가 있었다. 한은은 “수출물가가 원·달러 환율 하

락에도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 등이 오르면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2월 대외지표 개선은 수출 전반의 고른 회복이라기보다 반도체 중심 IT가 수출 측면을 주도한 성격이 강했다.

문제는 같은 2월 지표 안에서도 이미 3월 부담의 단서가 드러났다는 점이다. 2월 원·달러 환율 평균은 1456.51원에서 1449.32원으로 0.5% 하락했지만, 수입물가는 오히려 올랐다. 환율 하락에도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수입물가가 전월 대비 1.1% 상승했다.

두바이유 월평균 가격은 1월 배럴당 61.97달러에서 2월 68.40달러로 10.4% 뛰었다. 원유 등 광산품을 중심으로 한 원재료 가격도 3.9% 상승했다. 환율이 다소 진정돼도 유가가 오르면 비용 압력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점이 2월 수

치에서 이미 확인된 셈이다.

다만 교역조건 개선과 수입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났다고 해서 곧바로 모순으로 볼 순 없다. 원화 기준 수입물가는 해당 월의 환율과 국제가격 변동을 직접 반영하는 반면,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시차를 적용한 수출·수입 가격을 바탕으로 산출된다. 즉 2월 원화 기준 수입물가가 올랐더라도 전년 동월 기준 교역조건은 개선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지표는 수출 추가 가격 여건이 나아진 흐름과 에너지·원재료발 비용 압력이 동시에 존재했음을 함께 보여준다.

2월의 ‘좋은 숫자’만으로 3월 이후를 낙관하기는 어렵다. 한쪽에선 반도체 중심 IT와 수출물량 증가가 교역조건을 끌어올려 지표를 개선시켰지만, 다른 한쪽

에선 환율 하락에도 유가가 비용 압력을 밀어 올리는 구조다.

실제로 이날 아시아장에서 브렌트유는 배럴당 102달러대에서 높은 변동성을 이어갔다. 달러도 주요 중앙은행 회의를 앞두고 강제 흐름을 유지했다. 2월까지 수출 회복이 숫자를 지탱했다면, 3월부터는 고유가와 환율 변동성이 그 흐름을 흔들 수 있는 셈이다.

황건일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3월 들어 중동지역 분쟁에 따른 대외환경 급변으로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졌고 금융·외환시장 변동성도 크게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향후 물가와 성장 경로는 미국 관세정책 변화, 주요국 통화·재정정책, 반도체 경기 외에 최근 부각된 중동 상황에 크게 영향받을 것”이라며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 양상과 국내 경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



metro

>> 1면 ‘주유비 상승은 빙산일각’서 계속

트럼프, 호르무즈 해협 군함파견 재촉구

주요국 반응 냉담… “우리 전쟁 아냐”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동맹국들에 대한 파병요구의 수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의 일부 국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병요구를 단호히 거절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상황이 특수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7일 외신 등을 종합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내 유조선 호위 임무란 명분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등, 호주, EU 등에 군함을 파견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 시

간) 백악관에서 트럼프-케네디센터 이사회 오찬을 개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에 훨씬 더 의존하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도와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리는 이 항로에서 들어오는 원유가 1%도 되지 않는데, 일부 국가들은 그보다 훨씬 많다”면서 수십년간 미국의 안보 지원을 받아온 국가들이 정작 미국의 도움 요청에는 망설이고 있다는 불만을 쏟아냈다.

이어 “일본은 95%, 중국은 90%를 가져온다. 많은 유럽 국가들도 상당한 양을 들여오고 한국은 35%를 들여온다”며 “따라서 우리는 이 해협과 관련해 그들이 들어와 우리를 도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처음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를 지목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호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해외군군함파견을 요구했다. 전날에는 기자들과 만나 7개국에 요청을 보냈으며, “우리는 (이런 요청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는 위협성 발언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국가들이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일부는 매우 적극적이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다”며 “심지어 우리가 오랫동안 도와주고 끔찍한 외부 위협에서 보호해준 국가들조차도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우리는 어떤 나라들에 4만5000명의 훌륭한 병력을 주둔시키며 그들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왔다”며 “그런데도

그들은 개입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일본이나 한국, 독일 등을 겨냥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는 이란이 유조선을 향해 발사체 공격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이번 해군 작전은 “매우 사소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각국 반응은 냉담하다. 독일과 영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거절의사를 나타냈다. 이탈리아와 호주, 프랑스, 일본 역시 당장 군함을 파견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유럽연합의 27개국 외무장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호위 요청에 대해 “이것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라면서 군사개입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뉴스1

“내수 치명적 영향 줄수도”

그러나 해협 봉쇄가 수개월간 지속되고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수준까지 오르는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물가상승률이 1.1%p 상승하고 성장률은 0.3p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물가 급등에 GDP(국내총생산) 증가세 둔화라는 관측이다.

아울러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고 유가가 150달러 선까지 오르는 ‘오일쇼크 시나리오’에서는 물가상승은 2.9%p까지 폭등하고 성장률이 0.8%p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GDP 제자리 혹은 역성장도 감내해야 하는 시나리오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아직 경기 회복세가 공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상승이 내수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